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논평 (2019.11.20)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우리 정부에 강력히 권고, “입시 경쟁에 매몰된 아동권리 반드시 보장”해야...

- ▲ 2019년은 유엔총회가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한지 30주년 되는 해이며, 오늘 11월 20일은 ‘세계아동의날’로 정부는 해당 주간을 ‘아동권리주간’으로 선포하였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아동권리주간인 지난 11월 18일, ‘2019아동권리포럼’에 참석해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를 주제로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논의에 참여함.
- ▲ 앞서 지난 9월 27일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가 발표됨.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환경 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경쟁적 교육 시스템을 완화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함.
- ▲ 알도세리 위원은 심의현장에서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 것으로 보인다. 경쟁만이 목표인 것 같다.”라고 꼬집으며 과도한 학습시간으로 여가활동을 즐기지 못하는 대한민국 아동의 현실을 개선할 것을 촉구함.
- ▲ 한국 아동의 놀권리 침해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경쟁위주의 입시교육이며, 아이들은 학원 교습 등으로 여가 시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업부담과 입시 경쟁으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음.
- ▲ 정부는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한국 청소년들의 휴식과 여가, 놀이를 위해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충하는 등의 여가 시설 확대 운영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지만 놀권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가 발표하였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환경 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교육 시스템 경쟁 완화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함. 과도한 학습시간으로 여가활동을 즐기지 못하는 대한민국 아동의 현실을 개선할 것을 촉구함.

협약이 정한 의무에 따라 가입국 정부는 가입 뒤 2년 안에, 그 뒤 5년 마다 아동인권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그 국가보고서를 심의해 아동인권보장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해당국 정부와 함께 모색합니다. 우리나라도 1991년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2019년 제5·6차 심의까지 4차례의 심의를 거쳤고, 지난 9월 27일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가 발표되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G. 교육·여가 및 문화 활동 (협약 제28,29,30,31조)

교육 및 교육의 목표

41. 위원회는 **선행학습 관행**(예. 진학을 위해 취학 전에 사교육을 받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자유학기제 도입, ...을 환영한다. 그러나 당사국 아동자살의 주요 원인인 **과도한 학업부담**, 그에 따른 **수면부족**,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아동의 아동기를 사실상 박탈하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 환경**과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 (a)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치원에서 시작되는 사교육 의존의 지속적인 증가**;
- (i) 학업성과 관련한 경우를 포함하여, 학교에 널리 퍼져있는 ... 차별;
- (j) **학업으로 뛰어나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과 함께, 아동의 여가, 놀이 및 운동을 위한 시간과 안전한 무료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여가시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기여하는 것.

42. ... 위원회는 교육과정 다양화, 대학입시제도 재검토, ... 등을 포함하여 경쟁 완화라는 목표 하에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호(2001)에 부합하게 공교육 제도를 개선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것**; 공립 및 사립학교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할 것;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를 가할 것;
- (j) 아동 발달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전환하기 위한 인식제고 프로그램과 대중 캠페인을 실시할 것**; 모든 아동이 스포츠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놀이와 오락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및 시설을 보장할 것.

제82차 회기(2019년 9월 9일-9월 27일)에서 채택됨

2011년 이후 8년 만에 발표된 위원회의 최종견해에는 그동안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다양한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없지 않았으나,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한 영역에서 여전히 미흡하거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안들에 대한 위원회의 우려와 이에 따른 권고사항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8년 전 권고사항이 조금도 이행되지 않아, 이전과 동일한 권고가 반복되는 것 중 하나가 대한민국의 ‘경쟁적 교육 시스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위원회는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환경 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교육 시스템 경쟁 완화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8, 19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현장에서 대한민국 심의 코디네이터를 맡은 아말 알도세리 위원은 정부에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잠재력을 십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만이 목표인 것 같다.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고 꼬집으며 과도한 학습시간으로 여가활동을 즐기지 못하는 대한민국 아동의 현실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한국 아동의 놀권리 침해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경쟁위주의 입시교육이고 아이들은 사교육등으로 시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업부담과 입시 경쟁으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음

국내의 여러 보고서들은 우리나라 아동들의 놀권리가 충분히 구현되고 있지 못한 이러한 실상들을 수치적으로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 점수는 OECD 27개국 중 꼴찌였습니다. 우리나라 아동 중 1주일에 하루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아동은 36.9%에 불과('18. 아동실태조사)하여 신체활동 시간이 줄어드는 등 건강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고, 과중한 학업 부담,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기회 부족 등으로 아동의 우울 및 불안, 공격성은 2013년 대비 뚜렷하게 증가하는 등 마음건강 또한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 40.4%, 우울감 경험률 27.1%('18. 청소년건강행태조사)로 조사되었고, 자살생각을 하는 청소년 17.6%, 실제로 자살 행동을 한 경우 1.7%, 자살의도는 없지만 자해행동을 한 경우 5.8%('18년 소아청소년 정신질환실태조사)로 위기에 내몰려있는 아동들의 상황을 수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은 학업성취도가 높고 물질적 결핍은 낮은 수준이지만, 관계적 결핍(여가활동, 친구, 가족과의 행사 등)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8. 아동실태조사). 아동의 방과후 희망활동 조사에서 희망보다 실제가 가장 저조한 분야는 ‘친구와 놀기’, ‘신체활동 및 운동하기’ 순으로 나타나 놀이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희망보다 실제가 가장 높은 분야는 ‘학원이나 과외’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동의 70%이상은 평소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학원 또는 과외 등 학습관련 시간부족’이 전체 응답의 75%를 차지해, 청소년기 연령일수록 시간부

족 응답 비율이 상승하였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연구’(2016)도 지나친 학업부담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종 실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학업포기 충동 비율은 25.1%로 전체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데, 학업포기 첫째 이유로 학업부담이 41%로 나타났으며, 무기력 상태가 16.9%를 차지했습니다. 학생들의 평일 여가 시간이 2시간도 안되는 비율이 54.3%로 나타났고, 방과후 하루 평균 학습시간이 3시간이 넘는 학생 비율이 49.4%로 학습시간 과다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가시간의 부족과 학습시간의 과다현상은 상급학교로 갈수록 증가되는 추세이며, 대학입학의 학업부담이 원인이었습니다.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준중도는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학업스트레스, 자살 생각 등 정신건강문제, 여가시간 부족 등의 지표 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통계청이 발표한 ‘2018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3년 연속 1인당 사교육비 최대치를 갱신한 29만 1천원(전년대비 1.9만원증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육비 총액은 19조 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8천억원 증가하였고,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대비 1.7%p 증가한 72.8%를 기록했습니다. 학교급별 사교육비, 과목별 사교육비 어느 항목 하나 감소한 것이 없는 사교육비 폭증 대란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교육 참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 정부는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휴식과 여가, 놀이를 위해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충하는 등의 여가 시설 확대 운영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지만 이러한 정부의 해결책은 놀권리가 보장되지 가장 큰 원인(과도한 학구열 50.8%, 놀면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 34.6%)과는 다른 방향을 취하고 있음.

하지만 이런 현실을 개선하는 방향들을 정책으로 녹여내는 데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휴식과 여가, 놀이를 위해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충하고, 청소년 어울림마당·동아리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알도 세리 위원은 정부가 이러한 놀이정책을 성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아동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가? 내가 만난 한국의 아동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은 공부밖에 없다고, 학교가 끝나면 자정까지 학원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와중에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가?”라고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이 발표한 '한국 교육의 목표와 아동의 삶'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한 뒤, 저와 저의 학교 친구들은 모두 일주일 간 꼬박 심한 몸살에 걸렸습니다. 매일 6시 반에 일어나 10시에 집에 가는 생활에 적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교에는 야자가 자유훈이 있지만 저희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야자를 빠지면 선생님이 생기부를 안 적어준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생기부에 대한 압박은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해 뜨는 것을 보며 등교했고 밤이 되어야 집에 갔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주로 핸드폰을 하며 시간을 보내거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 (중략) ...

매일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공부가 인생의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모두 그렇게 말하는 상황에서 압박감을 견디며 사는 친구들, 그들에게 인생이란 항상 걱정되고 우울하며 회피하고 싶은 공간입니다. 완벽한 교육제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입시제도가 그렇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정시와 수시를 떠나서 이렇게 경쟁적인 분위기 속, 공부가 인생의 다라고 이야기하며 학창시절의 공부가 인생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사고가 아닌 암기를 시키는 교육, 양극화되고 똑같이 강압적이며 암기적이고 서열화된 입시제도는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제공할 뿐입니다.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천성은(고3) 학생 발언 중에서

배움과 두려움은 함께 일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경쟁적 입시제도의 틀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진정한 배움도 일어나지 못하고, 휴식과 여가, 놀이도 잃어버린 결과를 낳았습니다. 당장의 배움이 나의 진로와 미래에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알지 못한 채로 학업에 열중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모두가 달려가고 있는데 나만 멈춰있는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놀이에 집중할 수도 없는 진공상태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학교, 배움의 기쁨, 놀이의 다채로움, 휴식과 여가의 충만함, 관계의 성숙함, 과연 교육의 목적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진중히 고려되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 아동인권의 증진을 위해서는 의무이행자로서 국가의 노력이 필요. 2024년 12월 예정된 제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아동인권이 더욱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입법, 사법, 행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임.

"지식의 축적, 경쟁의 촉진 및 아동에 대한 과도한 업무의 부담에 초점을 맞춘 교육의 행태는 아동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의 최대한의 발현을 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강조되어야만 할 것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1. 교육의 목적, 2001)

"초등교육에서 반드시 익혀야 할 삶의 기술에는 글을 읽는 능력과 수리 능력만이 아니라 균형잡힌 결정을 내릴 능력, 비폭력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능력, 건강한 생활방식, 바람직한 사회관계와 책임감, 비판적 사고, 창조적 재능 및 삶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 때 필요한 능력을 개발할 능력을 포함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1. 교육의 목적, 2001)

"세계 여러 곳의 많은 어린이들이 공식적인 학업 성공에 중점을 두어 제31조에 따른 권리를 거부당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7. 휴식,여가,놀이,레크레이션활동,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 2013)

대한민국 심의 코디네이터를 맡은 아말 알도세리 위원은 정부에 "공교육에서의 심각한 경쟁을 완화시키고 아동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완화해 줄 패러다임 전환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간 시민사회에서는 선행교육 규제법 제정 운동(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원 휴일 휴무제 및 학원 심야영업 단축 관련 운동(쉽이있는교육 시민포럼), 자사고, 특목고 등 특권학교 폐지 운동(특권학교 폐지를 위한 촛불시민행동), 영유아 인권법 제정 운동(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능 절대평가 등 미래 역량 중심의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운동(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국민운동),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 운동과 같이 경쟁교육의 완화를 위한 노력과 활동을 끊임없이 지속해 왔습니다.

아동인권의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무이행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가장 중요한 책무성을 지닌 의무이행자이며, 2024년 12월 예정된 제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입법, 행정, 사법 전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아동인권이 더욱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 정서 발달을 위해 사교육 학습 시간을 제한하는 영유아 인권법을 제정하십시오.
2. 청소년의 건강권과 여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원 휴일 휴무제 및 학원 심야교습 금지 법률을 제정하십시오.
3. 분리교육이 아닌, 통합 교육을 통한 미래 혁신 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미래지향적 고교체제로 개편하십시오.
4. 대학 서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 입시 경쟁을 완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입학 보장제, 공동입학제, 국립대 공동입학전형 등의 정책을 추진하십시오.
5. 입시경쟁을 위한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초중고 교육을 지식 암기 중심에서 미래 역량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교육을 내실화하는데 집중해 주십시오.
6.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대책기구를 마련하십시오. 교육부 및 민간 합동 '사교육 경감 특별 기구'를 설치해서 이와 관련된 정부 대책안을 깊게 숙의하고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2019. 11. 20.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양신영 (02-797-4044, 내선 512)

붙임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보고서> 로 살펴본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의 의무 불성실 이행 실태 분석

붙임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보고서 종합표> - 지나친 경쟁 교육 쟁점 발취

붙임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로 살펴본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의 의무 불성실 이행 실태 분석

(1) 국가보고서(2017) 147항을 보면 "2016년 초·중·고등학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6,000원으로 2011년 이후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67.8%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힘.

그러나 국가보고서에 제시된 자료는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한 수치임.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계산할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는 37만8천원으로 증가하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약 50만원으로 조사됨. 즉, 이는 국가보고서의 분석과는 다르게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또한 2017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6천억 원(3.1%) 증가하였고, 월평균 사교육비는 271,000원, 사교육 참여율도 70.5%로 다시 증가함.

(2) "정부는 사교육비 실태 파악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2007년부터 매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힘.

하지만 최근에는 만 5세 유아 중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83.6%에 달할 정도로 영유아의 사교육 비중도 높아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사교육비 관련 통계 조사는 실시조차 되지 않고 있음.

(3) "정부는 선행학습의 관행을 근절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이루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2014년 9월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동년 12월에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수립하였다."고 밝힘.

그러나 사설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제재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며, 모니터링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함.

아동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아동권리 지킴이' 학생 660명 중 261명은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 별개로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은 제정되었으나, 과연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지는 의심스러움. 과열된 사교육을 정부가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 증가와 수면부족 등 아동의 권리 침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4) "정부는 2018년 1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자살률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략) 학교상담 내실화를 통해 학령기 마음건강 관리를 강화하고자 전문상담교사를 확충하여 학교 배치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 삶의 만족도는 6.6점으로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낮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가끔 생각한다'와 '자주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33.8%였는데, 2015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5) "정부는 경쟁적 입시문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아동권리 실현의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제도 개선 노력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와 아동의 창의적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힘.

하지만 청소년들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차별 문제는 학업성적(4점 척도 중 2.67)이었고, 실제 경험도 학업성적으로 인한 차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OECD 30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선진국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서도 한국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아동의 5대 스트레스 원인 중 1위는 '숙제나 시험 때문에', 2위는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였음.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사교육을 포함한 학습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한국의 학생들은 학습시간 자체가 매우 깊.

(6) 정부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해결책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아동 참여형 놀이터 등 여가 시설 확대 운영을 제시함.

그러나 정부의 해결책은 놀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과는 다른 방향을 취하고 있음. 설문조사에서는 놀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50.8%의 학생이 '과도한 학구열', 34.6%의 학생이 '놀면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라고 답함. 충분하지 않은 놀이문화 교육이나 놀이(환경)시설은 각각 3.0%, 4.4%로 낮은 편.

한국 아동은 과도한 학업부담과 경쟁적 교육환경 속에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하루일과 중 여가시간과 놀이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함.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중 '자유시간' 아동의 보고서에 따르면 450명 중 235명의 아동이 여가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 더 자세히 살펴보면 68.9%의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붙임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보고서 관련 문서 종합표> - 지나친 경쟁 교육 쟁점 중심으로

	국가보고서 (2017.12.27)	민간보고서 (2018.11.01.)	아동보고서 (2018.11.01.)	쟁점목록 (2019.02.19.)	쟁점목록에 대한 정부 답변서 (2019.08.09)	NGO추가의견서 (2019.08.15)
제Ⅷ장 교육·여가 및 문화 B. 교육의 목적 (제29조) <권고사항 7, 62~63b)> <u>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u>	147. 2016년 초·중·고등학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6,000원으로 2011년 이후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67.8%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표Ⅷ-8>참조). 정부는 사교육비 실태 파악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2007년부터 매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보고서 147~152항, 155항) 104. 정부의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017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6천억 원(3.1%) 증가하였고, 월평균 사교육비는 271,000원, 사교육 참여율도 70.5%로 다시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만 5세 유아 중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83.6%에 달할 정도로 영유아의 사교육 비중도 높아졌다.	그러나 아래 그래프를 보면, 국가보고서에 제시된 자료는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계산할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는 37만8천원으로 증가하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약 5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즉, 이는 국가보고서의 분석과는 다르게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48. 정부는 선행학습의 관행을 근절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이루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2014년 9월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동년 12월에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수립하였다.	105. 2014년 제정된 「선행교육 규제법」에 따라 공교육 내 선행학습 관행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시설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제재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며, 모니터링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나 학생 660명 중 261명은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 별개로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은 제정되었으나, 과연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과열된 사교육을 정부가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 증가와 수면부족 등 아동의 권리 침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49. 정부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7년부터 초등학교의 한글 교육시간을 확대하여 유아 교육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줄이고, '선행학습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고등학					

	<p>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대학별 입학시험이 출제되도록 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유도하고 있다.</p>					
<p>제Ⅷ장 교육·여가 및 문화</p> <p>B. 교육의 목적 (제29조) <권고사항 7, 62~63b></p> <p><u>학업부담 및 성적으로 인한 차별</u></p>		<p><u>학업부담 및 성적으로 인한 차별</u></p> <p>107.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사교육을 포함한 학습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한국의 학생들은 학습시간 자체가 매우 길다.</p> <p>108. 청소년들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차별 문제는 학업성적(4점 척도 중 2.67)이었고, 실제 경험도 학업성적으로 인한 차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30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선진국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서도 한국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아동의 5대 스트레스 원인 중 1위는 ‘숙제나 시험 때문에’, 2위는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였다.</p> <p>[권고사항]</p> <p>■ 「선행교육 규제법」 적용대상을 확장하여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등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p> <p>■ 사설교육기관의 과도한 선행 사교육 규제를 위한</p>	<p>■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3항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부분이 특히 잘 이행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주세요.</p>	<p>4. 다음 각 항에 관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p> <p>(a) 아동자살</p> <p>10. 교육제도에 대한 당시국의 평가결과를 제공하고, 나아가 추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십시오.</p> <p>(a) 학업스트레스, 성적에 따른 차별, 여가와 놀이 부족</p>	<p>Question 4. (a) 아동자살</p> <p>11. 정부는 2018년 1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자살률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p> <p>12. (중략) 학교상담 내실화를 통해 학령기 마음건강 관리를 강화하고자 전문상담교사를 확충하여 학교 배치율을 제고할 계획이다.</p> <p>Question 10. 교육제도 개혁</p> <p>(a) 학업 스트레스 및 놀이·여가</p> <p>52. 정부는 경쟁적 입시문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아동권리 실현의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제도 개선 노력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와 아동의 창의적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국가보고서 153~155번 문단 참조). 또한 고교 입시 경쟁 및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고입제도를 개선하고,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며,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등 학벌보다는 능력중심으로 인정받는 사회분위기와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p>	<p>Question 4. (a) 아동자살</p> <p>4.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 삶의 만족도는 6.6점으로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가끔 생각한다’와 ‘자주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33.8%였는데, 2015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p> <p>Question 10. 교육제도 개혁</p> <p>(a) 학업 스트레스 및 놀이·여가</p> <p>-답변 없음-</p>

		<p>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을 확보하라.</p> <p>■ 협약 제29조 및 교육의 목적에 관한 일반논평 No.1(2001)을 고려하여, 성적 위주의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p>			고 있다.	
<p>제Ⅷ장 교육·여가 및 문화</p> <p>C. 여가 및 문화활동(제31조)</p> <p><권고사항 62, 63c></p>	<p>159. 2014년 청소년의 여가생활시간은 4시간 33분으로 2004년보다 12분 감소하였다(<표Ⅷ-11> 참조). 정부는 방과후나 주말에 청소년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중략) 또한 지역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아동 놀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참여형 놀이터와 공원 조성, 놀권리 종합계획 수립, 놀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p>	<p><국가보고서 159-161항></p> <p>109. 한국 아동은 과도한 학업부담과 경쟁적 교육 환경 속에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하루일과 중 여가시간과 놀이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p> <p>110. 양질의 안전한 놀이 공간 부족 또한 아동의 놀이를 방해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다. 놀이공간은 집이 72.7%, 놀이터와 공원이 18.0%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경우, PC방, 카페, 영화관, 노래방 등 금전적 지출을 수반하는 놀이문화가 일상화되어 있어, 경제사정에 따른 접근성에 차별이 발생한다.</p>	<p>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중 '자유시간' 모듬의 보고서에 따르면 450명 중 235명의 아동이 여가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68.9%의 아동이 놀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략)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p> <p>정부는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한 해결책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아동 참여형 놀이터 등 여가 시설 확대 운영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해결책은 놀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다른 방향을 취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놀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냐는 질문에 50.8%의 학생이 '과도한 학구열', 34.6%의 학생이 '놀이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라고 답했다. 충분한 놀이문화 교육이나 놀이(환경)시설은 각각 3.0%, 4.4%로 낮은 편이었다.</p> <p>아동들은 '아동의 놀권리</p>		<p>54. 정부는 2019년 5월, 아동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창의성과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놀이정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2019년 하반기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놀이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놀이 공간, 시간,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동 놀이사업 확산을 위해 '놀이 혁신 선도지역'을 선정하여 아동 친화적 도시환경 구축에 필요한 자원을 우선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활동 공간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보고서 159~160번 문단 참조)</p> <p>55. 정부는 학습과 쉼, 창의적 놀이를 위한 학교 공간 혁신을 위해 2019년부터 5년간 총 5,000억원을 투자하여 약 1,250개교의 학교 공간 리모델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p>	

			<p>보장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한국 어른들의 고정관념'(50.9%)을 지목했으며, '새로운 교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록 높아졌다.</p>		<p>역에서 추진중인 초등학교 중심의 학교 일과시간 중 놀이활동 및 휴식시간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19년 7월 놀이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고시되어 영유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충분한 놀이경험을 통해 자율·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게 되었다.</p>	
		<p>[권고사항] ■ 과도한 학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아동의 여가와 문화생활에 대한 권리·휴식권 보장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학원법」에 따른 학교 교과교습학원, 교습소, 개인교습자 모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 아동의 연령과 특성을 고려한 아동친화적 놀이 공간을 확보하고, 경제적 사유로 휴식과 놀이·여가 문화 활동 향유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p>	<p>[권고사항] ■ 현재 침해되고 있는 대한민국 아동의 놀권리 및 쉼권리 보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른들에게 아동의 놀권리 교육을 실시해주세요. ■ 아동의 여가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법·제도를 제정 및 마련해주세요. ■ 아동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여가시설을 만들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해주세요. ■ 신체적 건강 못지않게 정서적인 안정 또한 중요함을 인식하고, 정부에서는 올바른 정서 함양과 정서 안정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교육을 제작하고 실행해주세요.</p>			